

시민후보 내겠다던 시민단체, 아직 '잠잠'

“거론되는 인물 모두 고사 중”

4월 전주를 재선거 관련 “이른 시일 후보 선정할 것 진보단체와 연대 미지수 합의점 찾아 역할 찾을 것”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중심의 준비모임이 오는 4월 재선거에 시민 후보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는 4월 전국 유일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는 전북 전주를 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후보를 내겠다고 나섰다. 신봉치 의원은 모순이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출신 100여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힌 준비모임은 18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찾아 “건강한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힘으로 전북 정치를 바꾸겠다”며 후보 선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0여 명의 추천인을 무난하게 모집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후보를 선정할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

사전 접촉 중인 구체적인 후보군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준비모임 측은 “환경운동역에 이정은, 언론운동역에 손주희, 시민운동역에 임성복, 통일운동역에 방용승씨 등과 의견을 나눴지만 모두 고사 중이다. 아를 외에도 새로운 인물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 사실상 후보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 선정에 있어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하겠다는 것 외에는 100여 명의 추천인 명단 공개와 선대위 조직, 선거자금 마련 등 과제가 산적한 실정이다.

특히 진보 계열 정당 및 노동·농민단체 등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뚜렷한 구상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후보 추진은 일반적인 것으로 명칭 부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준비모임 측은 “진보그룹과 관련해 아직 저회하고 같이 함께하지 못한 한두 군데 단체의 후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쪽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라며 “나중에 후보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가 제3당의 어떤 이익점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이 된다고 하면 우리 후보로 하여금 후보를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준비모임 측은 “사실 오늘 기자회견 전까지 후보를 선정하려 했으나 결단하지는 분이 없어 공개하지 못하게 됐다”라며 “시간이 부족한 만큼 2월 초까지 후보를 선정하고 1000명의 추진위를 모집해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북환경청, 설 연휴 화학사고 대비 안전활동

26일까지... 비상근무반 편성

전북지방환경청은 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해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화학사고 대비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휴 기간 중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북환경청과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2인 1조 24시간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또 연휴 전·후 주요 산업단지과 사고대비물질 다량 취급시설 등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무단방치 및 운반차량 불법주차 등 방지를 위한 현장순찰도 마련했다.

특히, 첨단 분석 장비인 화학사고 현장추적·분석차량을 활용해 사업장 주변 유해화학물질 유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주변 하천과 배수로 등을 통한 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여부도 감시할 계획이다.

순찰·감시 결과 적발된 사업장은 특별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화학물질 무단방치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해 사업장간에 송지할 전망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285개 사업장에 안전점검표를 배포, 연휴 기간 중 취급시설을 중단·미가동할 경우 안전조치 여부, 동절기 동파 예방조치, 외부인 출입통제 조치여부 등을 사업장 스스로 자체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이재명, 검찰 출석 통보 관련 “변호사 1명 대동 28일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등 의혹 조사를 위한 검찰 출석 통보 관련 “아무 잘못도 없으나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변호사 1명 만을 대동해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에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북도의회는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100년 역사의 군산 공설시장에서 장보기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도의회, 군산공설시장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생선·과일 등 구입... 복지시설 찾아 물품 전달 격려

전북도의회는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100년 역사의 군산 공설시장에서 장보기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국주영은(전주2) 의장과 강태창(군산1)·김동구(군산2)·박정희(군산3)·문승우(군산4)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20명은 이날 군산 공설시장에서 강숙자 상인회장과 만나 전통시장에 처한 어려움을 듣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전통시장을 이용합시다”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생선과 과일,

육류 등을 구입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과 아동보육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무료 급식소 등 4곳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대형마트 보다 2~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며 “이번 설 명절에도 제수용품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독립 조사기구 구성, 이태원 진상규명 계속”

민주·정의·기본소득당, 국정조사 종료 관련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종료된 데 대해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참사의 진상규명은 계속된다”며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은 끝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거부한 셈”이라며 “대체 그 어디에 정쟁이 있고 역사가 있다. 이는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애초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도 없었다는 뜻”이라며 “바로 옆에서 유가

족의 정위를 목도하면서도 국민의 힘은 초지일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탄방탄을 위해 인간질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더니 결국 소환조사를 압수수색 한 번 없이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얻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이 장관에게 그 책임 엄중히 물겠다”고 다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독립적 조사기구를 국정조사로 채 밝히지 못한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만들겠다”며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마친 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재난안전특위를 통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 구조 및 대응이 시스템 아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추진하겠다. 재난안전특위 역시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해 정


부가 제출할 대책을 특위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우려 “차고 넘치는 정치적 책임에 더해 국정조사에서 한 위층으로 법적 책임까지 질 이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유족과 생존자를 향한 정치적 폭력”이라며 “윤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끝내 회피한다면 야당과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삼풍백화점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것이 재난안전법이고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것이 국가위기관리법”이라며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국민의 울분과 고통, 염원이 녹아있는 재난안전체계가 대통령 하에 이르러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원내대표는 “재난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이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특검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김제시의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